

# ‘지역의사·공공의대’ 야당發 의료개혁

### 의사들 반감 공약...‘합리적 의대증원’ 약속도 巨野 두려운 의사들...정부 공격하면서도 ‘당혹’ 의대 증원은원래야당정책...여야, ‘협치’ 가능성 주목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이번에는 ‘거대 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정부·여당과 의료계 사이 갈등이 커져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야당이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면 의료계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거셀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치는 정치권과 의사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의사 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2천명 증원 백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보다 더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이런 ‘의료개혁’을 접어야 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작년 12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 이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까닭에 의사단체들은 여당의 참패에 대해 “일방적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야당의 압승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총선 전에는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역설했던 임택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

협) 회장이 총선 후에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고 적은 것은 거대야당이 정부·여당보다 더 강한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총선 결과를 놓고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의사들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야권 일각에서 총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2천명 증원”에 대한 속도조절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의대 증원은 야권이 이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외에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역시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의료계와 만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약 파기가 되는 만큼 의사들의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증원 추진과 의료계 협동에서 힘을 모은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지역의사제’를 대신한 ‘지역필수의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데, 두 제도를 절충한 방식을 고민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을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분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총선 당선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당선자 총회...위기 수습방안 논의

### 윤재욱, 오늘 4선 이상 중진과도 별도 간담회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갈

은 총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을 당부했다.

당선자들은 오전 8시30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단체로 참배하고, 곧장 국회로 이동해 오전 10시부터 총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당내에서는 지도부 교체 선출 방식과 시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크게는 일단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정식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 채상병특검법·이태원특별법 처리될까?

### 민주,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방침 세워 안철수 등 국힘 일각서 “찬성해야” 목소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해병대 채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을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개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0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표결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다음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유가족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